남·북·러 '신북방의 해'…1000억달러 교역 시대 연다

디벨로퍼 협의체 만들어 철도·도로·플랜트 사업 발굴·투자 유치

한-러 투자 FTA은 조기 타결…중앙아 5개국에 '9개 다리' 적용도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신북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모델을 중앙아시아 국가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분야에서의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해 향후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는 100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세안(ASEAN) 등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매진한 정부는 올해 러시아와의 협력 기반을 토대로 신북방국가와의 교류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교 30주년을 맞은 러시아와의 경협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른바 '9개 다리'로 불리는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협력분야에 금융·문화·혁신 등 분야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금융 분야는 양국이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4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10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은 조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며 정부는 혁신·에너지·보건의료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를 포함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올해 양국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경제·문화예술·지식교류 등 270여개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반도와 인접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남·북·러 3각 협력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러시아의 직접투자펀드(RDIF)간의 디벨로퍼 협의체를 구축해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대북·대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을 발굴해 수출금융 등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300억달러인 대(對)러시아 교역 규모를 한-러 경협을 통해 500억달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남·북·러 3각 협력까지 성사되면 교역 규모는 100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디벨로퍼들이 사업을 발굴한다면 수익성이 있고 제재도 피해갈 수 있는 창조적인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발굴되면 수출금융이나 투자자들을 네트워킹해 인프라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협력 모델을 중앙아시아 5개국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에도 '9개 다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산업·문화·보건 분야의 산업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해당 국가의 인프라 수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몽골, 독립국가연합(CIS)에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연계해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이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러시아와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해 한러 경협사업의 실행력과 결실을 제고하면서 중앙아시아·몽골 등 다른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비전과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젊어졌다" 50대 사장만 10명…최연소 52세

사진 왼쪽부터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 전경훈 IM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황성우 종합기술원장 사장의 모습.

삼성전자가 20일 4명의 신임 사장 승진자를 포함한 2020년도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50대 나이의 '젊은 사장' 타이틀이 10명으로 늘었다.

김기남 DS부문장 부회장, 고동진 IM부문장 사장, 김현석 CE부문장 사장 등 유임된 기존의 대표이사 3인이 갖춘 '경험'과 '관록'에 모바일·네트워크·재무 등 분야별로 뛰어난 기술을 갖춘 신임 사장단을 전진배치한 '신구조화'를 앞세워 대내외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에서 신임 사장이 된 인물은 △전경훈 네트워크사업부장(58) △황성우 종합기술원장(58) △최윤호 경영지원실장(57)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56) 등 4명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1962~1964년대생으로 모두 5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진교영·강인엽·정은승 등 반도체 담당 3대 사업부장이 모두 승진했던 2017년에 7명의 사장 승진자 평균 연령 55.9세와 비교하면 다소 높아졌다.

평균 연령은 높아졌지만 50대 신임 사장이 4명이나 합류했다는 점은 삼성이 여전히 '세대교체'와 신상필벌의 인사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계열사인 삼성전기 신임 대표이사로 승진 내정된 경계현 삼성전자 부사장도 1963년생으로 올해 57세다.

올해 인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사장단에서 50대는 10명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7명이었으나 노희찬 경영지원실장이 물러나 6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신규 승진한 50대 사장단 4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 따라 삼성전자에서 김기남 DS부문장 부회장(62) 이하 미등기 사장급 이상 임원의 평균 연령은 종전 58.9세에서 58.5세로 다소 낮아졌다. 최고령은 올해로 63세인 성인희 의료사업일류화 추진단장이며 최연소는 52세의 노태문 신임 무선사업부장이다.

노 사장은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0년만인 2007년에 상무로 승진했다. 이후 2011년 전무 승진, 2012년 부사장 승진 후 2018년에 사장을 달았다. 입사 이후 사장까지 만 23년도 걸리지 않은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선개발실장을 맡다가 무선사업부장까지 꿰차면서 추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네트워크 사업을 총괄하는 IM부문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50대 신임 사장단 4명을 등용하면서도 기존에 DS·IM·CE 등 3대 부문장 대표이사 3인은 유임하기로 했다.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김현석 사장 등 3인이 대표로 부임한 지는 올해로 3년차다. 부문장 3인의 리더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술과 재능을 겸비한 50대 사장단을 추가로 발탁해 글로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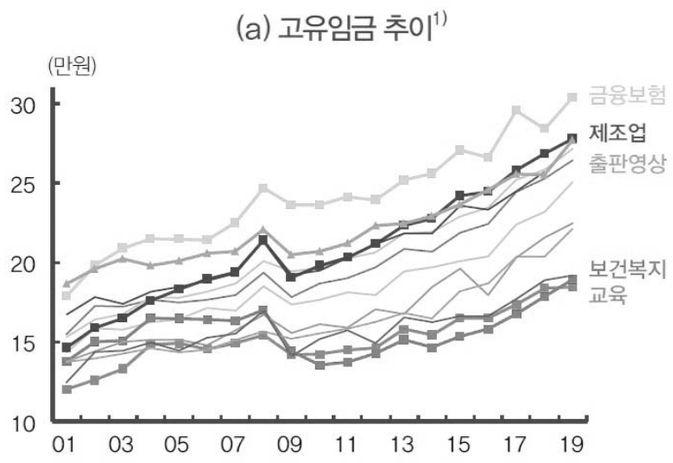
김 부회장, 고 사장, 김 사장 등 사업부문장 3명은 각 사업부별 시너지 창출과 전사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커넥티드카 같은 신사업 발굴과 인재 양성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3인의 대표이사가 가진 관록에 50대 신임 사장단의 기술력과 역동성을 앞세워 새로운 전략과 조직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장단 인사를 마친 삼성전자는 조만간 부사장급 이하 임원 승진 인사와 조직개편 등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에 준법경영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쇄신이 담길지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훈 사장이 법정구속되면서 공석이 된 이사회의 신임 의장을 누가 맡을지와 이사회의 향후 개편방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한은 "노동재분배 하면 韓 임금소득 4.1~5.3% 늘어날 것"



산업 간 노동력 재배분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최적 임금소득이 실제수준 보다 4.1~5.3%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성을 해소하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임금소득이 사회 전체적으로 4.1~5.3% 늘어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20일 BOK 이슈노트 '산업 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 연구는 산업별 고유임금의 격차가 없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가정한 상황에서 최적임금소득을 추정한 후 실제 소득과 비교했다.

비교 결과 최적임금소득과 실제 소득의 격차(최적소득갭률)는 임금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2.5~5.7%(평균 4.1%, 2019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노동패널 기준 3.0~7.6%(평균 5.3%, 2017년)으로 추정됐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최적소득갭률은 2001년 평균 3.0%에서 2019년 4.1%로 1.1%p(포인트) 커졌다. 노동패널에서도 최적소득갭률은 2001년 평균 2.1%에서 2017년 5.3%로 3.2%p 확대됐다. 이는 산업 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노동력이 산업 간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저해되고 성장잠재력이 잠식되는 부정적 파급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력의 비효율적 배분은 총요소생산성(TFP) 하락을 통해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TFP는 2000년대 평균 3.1%에서 2011~2017년 중 1.1%로 큰 폭으로 둔화됐다.

이 연구에서 최적임금소득을 산출한 효율적인 노동시장은 종사하는 산업에 따라 달라지는 산업별 고유임금의 격차가 노동이동으로 해소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효율적인 노동시장은 노동자 개인의 교육 수준, 숙련도 등에 따른 개인의 인적자본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예컨대 회계사 A씨가 교육업에서 회계 일을 하든 금융업에서 회계를 하든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

보고서는 "진로와 학력습득 간 적절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환경 정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한국재계의 거인'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19일 오후 4시29분 별세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에서 "노환으로 입원 중이던 신 명예회장은 지난 18일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으며 19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고 밝혔다.

장례는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고인을 기리고자 그룹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명예장례위원장은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맡는다. 장례위원장은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이사가 담당한다.

신 명예회장은 한국 재계의 '거인'으로 평가 받는다. 그는 일제시대인 1941년 홀로 일본으로 가서 신문 우유 배달 등을 하며 학비를 벌었다.

지난 1944년 선반용 기름 제조공장을 설립했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공장이 화재로 타버리는 아픔을 겪었다.

절치부심한 끝에 일본에서 소규모 식품업을 시작해 한·일 양국에 걸쳐 식품과 유통, 관광, 석유화학 분야의 대기업을 일궈냈다.

특히 일본에서 기업가로 성공한 후 한·일 수교로 한국에 대한 투자의 길이 열리자, 1967년 롯데제과를 시작으로 호텔롯데·롯데쇼핑·호남석유화학 등을 잇달아 창업하거나 인수하면서 롯데그룹을 재계 5위의 대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는 한국에 투자할 때부터 '기업보국'(企業報國)을 강조했다. 회사의 역할이 수익을 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봤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면서 "(롯데의) 기업 이념은 품질 본위와 노사 협조로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과 호텔업 등에 투자하면서 한국 관광업의 미래를 내다보기도 했다.

뉴스1

금감원, 오픈 다트 시범 운영

금융감독원은 민간 부문이 공시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 개방전용 서비스인 'Open DART'를 구축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식 서비스는 오는 4월 개시될 예정이다.

Open DART의 주요 서비스인 오픈API(누구든지 DART 공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표준규약)의 경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기업개황, 공시목록 등 2종에서 전체 공시서류, 사업보고서 주요정보, 지분공시 주요정보, 상장기업 재무정보 등 23종으로 확대된다.

누구나 Open DART 홈페이지에서 오픈API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오픈API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Open DART에서 회원정보 이관과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치면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DART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공시정보 활용마당 코너는 Open DART로 이전된다. 이 코너는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 회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코너의 모바일용 화면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핀테크 업체 등 참여자 면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현황과 데이터 활용 수요 등을 파악해 공시정보 개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확대된 오픈API 서비스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핀테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부터 연구·투자분석기관까지 공시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 공시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문화 정착이 기대된다"고 했다.